

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공감대'

우범기 정무부지사, 전주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 입주기업들과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11일 도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한 현장행정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주시 제1·2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등 11개 사 대표들이 참석해 우범기 정무부지사와의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타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지역 내 생산직 근로자의 구인 애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 등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모든 참석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주산업 입주기업 대표인 전북기술 운영권 대표는 "전주시 제1·2 일반산업단은 노후화된 공간으로,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내수 경제가 좋지 않아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기업들도 코로나 종식을 간절히 희망하며 방역대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기업인의 어려움에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11일 도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전주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에 참석,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감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코로나 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국회 통과돼야”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 전북도당이 '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법안을 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연인 만큼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손실보상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소급적용이 쟁점이 되면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전북도당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탓하며 서로 통과되지 않을 사유를 찾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 23조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돼 있다. 그 법이 감염병 예방법이다"며 "이에 대한 보상도 법률로 하도록 돼 있으며, 그 법이 코로나손실보상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한 날부터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규정이다"며 "5월에는 코로나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북의 민생위기 심각성과 자영업자의 피해 및 고통은 어느 지역 못지 않을 것이다"며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은 전북 자영업자와 관련 종사자에게 너무나 절실한 법안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율리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전북도당은 최선을 다해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9월 14일 '산업단지의 날' 지정 추진 가능성

민주 신영대 의원, 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단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 제조업의 부흥과 경제발전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위상을 높이고, 그 핵심 주체인 기업을 격려하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업단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매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최로 일



주기업·정부·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 행사를 열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단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의 미흡으로 정부 포상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신 의원은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운영 근거를 최초로 규정할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산업단지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코로나 19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도 굳건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에 산업단지의 역할이 향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키를 쥐고 있다"며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의 혁신과 기업 매력, 기술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주력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서 산업단지가 더욱 큰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농어촌경제 회복... 민주이원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 개정안 발의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11일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정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



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를

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업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면제, 농어촌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등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 정체성 확립 '전주학' 연구 추진

김남규 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주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의 미래 발전상까지 제시하는 '전주학' 연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남규(사진, 송천1·2동) 의원은 최근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전주학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해 정책과 연구기반, 인재양성, 연구성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심의·자문하는 전주학진흥위원회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했다. /김윤성 기자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요구 합의

전국 시도의회의장의장협,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전국시도의회의장의장협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단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는 정부에 지방의원 전담 연수기반을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는 11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전담교육기관 설립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시도의회의장의장협의회에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립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로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내년 예산에 연수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TF위원들은 회의에서 지방자치인재

개발원내 지방의정연수센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서둘러 연수센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송지용 단장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다"며 "지방의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정연수기반을 별도로 설립하기에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센터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또, 송 단장은 "위원들이 지방의원 교육이 시급한 만큼 정부에 연수기관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IMSIL-GUN
임실군

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